

## 하동군과 한국남부발전은 하동LNG발전소 건설사업 중단하라!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은 하동군 대송산업단지(이하 대송산단)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발전은 오는 9월 부지계약 체결, 내년 9월 부지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대송산단에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남부발전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송산단 분양 및 관리 시행기관인 하동군은 기후위기 시대,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가 아닌 RE100 산단으로 조성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가정책이라 하동군이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시행기관이 지닌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다해야 할 책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과 하동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사단법인 PLAN 1.5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왜곡 또는 조작하여 이 사업을 강행하는 남부발전과 아무런 책임도 역할도 하지 않는 하동군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대송산단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 조건

대송산단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일부로 개발과 분양에 있어 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자본 유치와 수출기업 입주 산단 개발의 목적이며, 특히 입지와 분양은 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업종에 한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비추어보면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외부 송출용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그 입지가 제한됩니다.

2023년 7월 7일 개발계획 변경 고시는 입주 업종을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늘린 것이 전부이고 화력발전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부발전이 대송산단 내 부지를 매입하려면 동법 제9조의78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에 따라 시행기관인 하동군은 물론 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관할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LNG발전소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고시되지 않았기에 부지도 매입할 수 없습니다.

### 대송산단 분양에 있어 하동군의 책임과 역할

이번 개발계획 변경 고시는 하동군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하동군은 제개정 이유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 산업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LNG발전소는 하동군의 의견과 충돌하며 개발계획 변경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대송산단 개발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분양에 있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하동군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회피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권한을 포기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어렵게 마무리하고 있는 대송산단은, 재정 위기에 따른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던 하동군민과의 약속대로 당초 목적에 맞게 분양되어야 합니다. 하동군은 더 이상 국가정책 운운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시행기관으로서 당초 목적대로 대송산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습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이 우리에게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를 더 이상은 늘려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LNG발전설비의 과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의 LNG발전소 건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 기후는 우리에게 이윤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부발전은 대송산단에 추진하고 있는 LNG발전소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고, 하동군도 대송산단 개발계획의 취지에 따라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가 아닌 탄소중립을 위한 산단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2023년 9월 4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단법인PLAN1.5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하동녹색당 하동참여자치연대